

KINU 정책제안서 12-15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정책제안서(12-15)

인쇄 2012년 11월 발행 2012년 11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기획·디자인·인쇄처 두일디자인(2285-0936)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900-4300(대표) 901-2525(직통)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통일연구원, 2012

비매품

정책제안서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연구책임자: 허문영(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정아(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권오국(통일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위원)

배기찬(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초빙교수)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1. 배경 및 문제점	1
2. 주요 연구결과	3
가.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3
나.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의 이해관계	5
다. 재외동포사회와 통일문제	6
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9
3. 정책제언	10
가. 고려사항	10
나. 정책적 추진방안	14
4. 기대효과	16
참고자료	18

표·그림 목 차

<표 1> 분단의 피해, 민족발전 저해 정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체감도	8
<표 2> 분단극복을 위한 과제	8
<그림 1> 코리아를 둘러싼 패권의 양상	3
<그림 2> 해양세력 vs 대륙세력의 충돌 유형	5

1. 배경 및 문제점

지난 정권 10년 동안 남북 화해·협력에 기반을 둔 대북정책의 추진과 그에 따른 통일교육이 전사회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2010.3) 및 연평도 포격사건(2010.11) 이후, 북한의 입장과 현실을 목도한 국민들은 심각한 가치혼란을 겪었는바, 이에 대한 올바른 통일관의 정립과 국가 정체성의 재확립이 요구되었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 의식과는 다소 유리된 측면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변화된 시대상황과 국민들의 의식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 및 수준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북한실태 교육은 북한실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써, 통일유보론 내지 反통일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며, 남남갈등에 따른 국론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¹⁾ 따라서, 통일비전과 통일미래상에 대한 객관적인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키고,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한편, 통일의지를 제고하여 통일대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민족 내부 문제이나,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서 보듯 주변 4국(미·중·일·러)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국제 문제이므로 이들의 도움과 우호적 여건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구한말 국권의 상실과정에서 보듯 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② ‘주변국과의 역사적 관계,’ ③ ‘주변국의 국가이익,’ ④ ‘주변국의 세력관계’ 등의 상호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주변 4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자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관점에 따라 ‘조건부 찬성’ 또는 ‘현상유지’ 정책을 선호하나, 우리의 창의적 외교노력과 전개여부에 따라 ‘현상유지’를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명확한 국가목표(국익)를 분석해야 하고, 그들의 국익이 통일한국과 충돌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교통상부의 『2011년 재외동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수는 726만 8,771명에 달하며, 아주지역(406만 3,220명), 미주지역(252만 1,470명), 구주지역(65만 6,707명) 등의 순으로 집계 되고 있다. 주변 4국에 거주하는 국가

1) 허문영 외, 『통일교육: 과거, 현재, 미래』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183.

별 재외동포는 중국(270만 4,994명), 미국(217만 6,998명), 일본(90만 4,806명), 독립국가연합(53만 5,679명)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²⁾ 우리나라는 중국의 화교,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탈리아의 해외교포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많은 재외동포를 보유한 국가이다.

21세기 국제질서의 주요한 특징은 전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동성과 정보혁명 및 세계화의 결과로 네트워크에 기반한 새로운 복합적 국제질서의 출현이다. 네트워크 시대의 핵심은 사람이며,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풍부한 재외동포라는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자신들의 거주국가와 모국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들을 위한 체계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주변 4국의 국가이익³⁾ 및 목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주변 4국의 정치·경제·군사·문화적 이익과 양립가능함(compatibility)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국의 여론주도층 및 재외동포사회에 논리적으로 설파함으로써 통일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미·일·중·러 주변 4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한인들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피상적 차원의 서술이 아니라, “주변 4국의 <세계전략>⁴⁾ <동아시아 전략> <한반도 정책>의 구체적 내용

2) 외교통상부, 『2011년 재외동포 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2012), p. 3.

3) 국가이익의 개념 발전에 공헌한 사람은 비어드(Charles A. Beard)다. 그는 국가이익은 외교 영역에서, 공공이익은 내정에서 쓰이는 것으로 구별하고, 경제적 요인이 인간행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미국의 국가이익을 경제적 이익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파악했다. 울퍼스(Arnold Wolfers)는 국가이익의 개념에 정책결정자의 선호, 편견 등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어 과학적인 연구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편 스나이더(Glenn H. Snyder)는 국가이익이 가치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자가 결정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라고 규정했다. 구영록은 “한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 과정을 통하여 표현되는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욕구와 갈망”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정책의 현실과 이상』 (서울: 범문사, 1995), p. 25.

4) 미국의 세계전략은 백악관, 국방성 등에서 발표되는 공식문서들-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4개년국방정책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 탄도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ce Review, BMDR)-을 통해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들 문서를 2010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

은 무엇인가? 그리고 통일이한국이 성립될 경우, 각국이 얻게 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익에는 어떠한 것들이 성립 가능한가?”와 같은 구체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가능한 해법과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성과물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본 보고서는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일이한국은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68개국에 흩어져 있는 726만 우리 재외동포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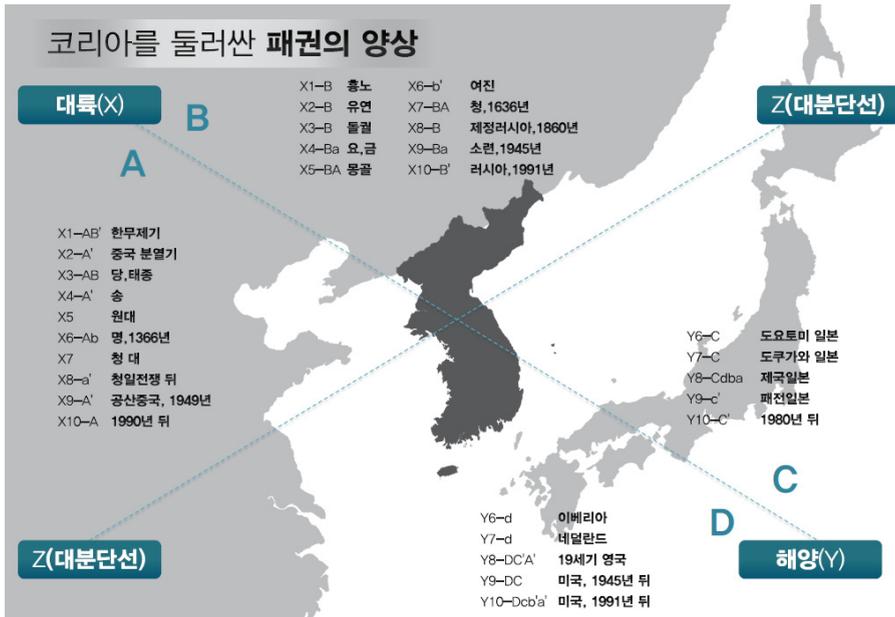
가.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II장에서는 한반도가 세계사의 흐름 및 동아시아 구조 속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져 왔는지를 살펴보았다.⁵⁾ 한반도를 중심으로 2000년에 걸쳐 지리적, 문명적으로 형성되어온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구조적 특징은 역사적 시기에 따라 일정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security_strategy.pdf> 참조.

5) 본 장의 기본적 관점은 다음책에 근거하고 있다. 배기찬,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서다』 (고양: 위즈덤하우스, 2005) 참조.

<그림 1> 코리아를 둘러싼 패권의 양상



세 번째 특징은 두 개의 대륙세력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근대 이전까지 이 선은 만리장성(The great wall)이었는데, 남방에는 한족에 근거를 둔 농경민족국가가 나타났고, 북방에는 거란·여진·몽골족에 근거를 둔 유목민족국가가 출현했다.

네 번째 특징은 해양세력들 간의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은 남한, 오키나와, 타이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네 지역을 장악하는 세력이 해양패권을 장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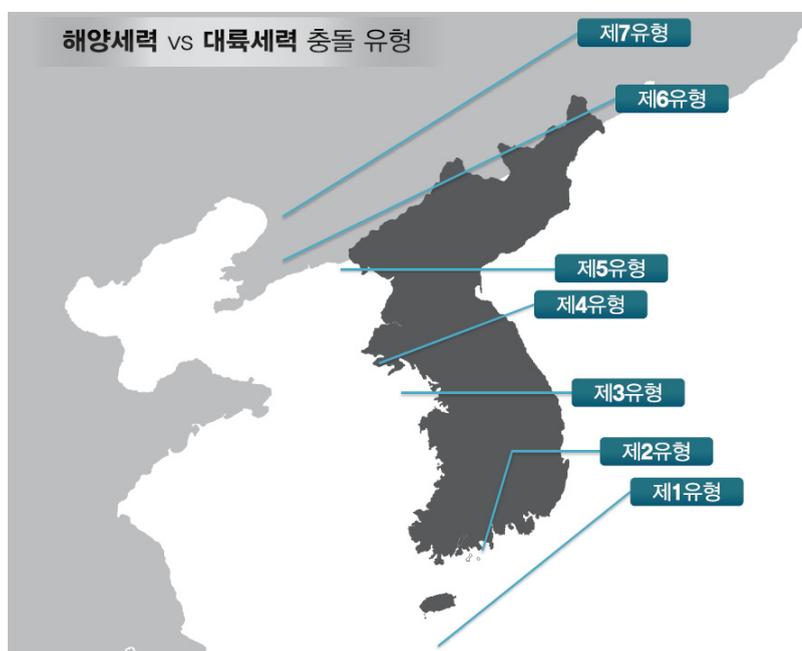
다섯 번째 특징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반도다. 코리아는 근대이전에는 유목국가적 성격에서 농경국가로, 그리고 1945년 남북이 분단된 뒤에는 남(南)은 해양세력, 북(北)은 대륙세력의 일원이 되어 동아시아에서 서로 대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 vs 대륙세력 간의 충돌유형은 8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힘의 배분과 세력균형에 따라 대륙세력(중국·러시아)과 해양세력(미국·일본) 간의 충돌이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다.⁶⁾ 오늘날의 분단선은 1300년 전 고구려의 멸망과 임진왜란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강화교

6) 배기찬,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서다』, p. 150.

섭 요구사항, 그리고 19세기 일본과 러시아의 분할안 및 현재를 있게 한 미·소의 분할선이다. 결국, 한반도는 역사를 통해서 보듯 해양세력 vs 대륙세력의 대결구도가 지속되어 왔고, 통일국가의 성립 또한 이러한 세력분배의 조합 위에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해양세력 vs 대륙세력의 충돌 유형



나.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의 이해관계

제Ⅲ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 4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한반도 통일이 이들 국가에게 어떤 이익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지를 정치·경제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미국은 유일초강국 지위를 고수하는 가운데, 유라시아 대륙관리와 비확산레짐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는 적극적 관여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의 유지와 북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단기 비확산, 중장기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 부합한다. 즉,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양대 축으로 활용하여, 동아시아에 지속

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본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지닌 또 하나의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1년 9월 ‘평화발전백서’를 통해 주권, 국가안보, 영토보전, 국가통일을 4대 핵심이익으로 규정하였다.⁷⁾ 따라서, 중국국민에게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아주 다양하다. 지역충돌에 연루될 우려가 없으므로 화평굴기(和平崛起)할 수 있다. 북한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시 우려되는 난민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일본의 세계전략은 “미국의 방위우산 아래에서 경제발전에 전념한다”는 ‘요시다 독트린’ 구도 하에 미국의 전략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⁸⁾ 일본이 통일한국을 지지해야 할 이유로는 일본의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다. 통일한국의 성립은 과도한 군비경쟁에 몰입될 가능성을 줄어둘게 할 것이며,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탈아주의(脫亞主義)로부터 입아주의(立亞主義)로 회귀하여 ‘동아시아공동체론’을 주장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는 2015년 5월 제3기 푸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강한 러시아’를 기치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를 다자체제로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⁹⁾ 러시아는 북한의 주요 산업기반시설 대부분을 구소련 시절에 건설해준 바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이들 시설을 복구·보수하는데 참여할 수 있으며, 낙후된 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한반도 중단철도(TKR)의 연결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재외동포사회와 통일문제

제IV장에서는 재외동포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민족 정체성 및 통일의식을 조사해 보았다.

재외한인사회 형성의 역사와 지정학적 위치에서 드러나듯이 재외동포들은 식민과 분단이라는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적 수난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1만 명 이상 재외한인 동포가 거주하는 국가만도 15개 나라에 이른다.¹⁰⁾

7) 『경향신문』, 2011년 9월 7일.

8) 손기섭, “일본자민당의 전후국가전략,”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3호), pp. 147~148.

9) 제성훈, “푸틴의 귀환, 러시아의 진로: 3기 푸틴정부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정책전망,”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16호 (2012.5), p. 2.

1860년부터 시작된 재외동포사회의 역사는 이주배경과 정착지의 특징에 따라 4개 시기로 구분된다.¹¹⁾ 제1기는 1860~1910년 한일병탄까지이고, 제2기는 1910~1945년 해방까지의 시기이다. 제3기는 1945~1991까지의 시기로 직업, 결혼, 유학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다. 제4기는 1991~현재까지이며 조기유학, 명퇴·은퇴 이민 등 새로운 유형의 이주가 등장하였고, 국가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¹²⁾ 주변 4국 거주 재외동포의 대다수가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고 보며, 통일이 재외동포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았다(<표 1> 참조). 이들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아직도 적대적 대립과 불신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분단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남북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표 2> 참조). 또한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며,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 열강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현실주의적 외교노선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외교통상부, 『2011년 재외동포 현황』, p. 3.

11) 최진욱,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07);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참조.

12)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분단·통일의식』 (서울: 선인, 2012); 김재기, “남북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대북한 경제협력: 중국 조선족과 재일 조총련 동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0권 1호(한국동북아학회, 2005); 우병국, “남북교류 활성화와 재중동포사회의 역할: 현황, 한계 및 전망,” 『동서연구』, 제22권 제1호 (2010년 6월), pp. 339~367.

<표 1> 분단의 피해, 민족발전 저해 정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체감도

분류		재중동포	재러동포	재일동포
한반도의 분단과 6.25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피해를 입었다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다	65.7	59.8	87.9
	다소 피해를 입었다	29.6	32.8	10.2
	피해를 입지 않았다	4.7	4.0	0.6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현재 우리 민족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그렇다	82.2	81.0	83.1
	아니다	17.8	18.1	15.0
남과 북의 통일이 우리(해외동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83.5	88.7	78.3
	아니다	16.5	10.7	18.2

<표 2> 분단극복을 위한 과제

분류		재중동포	재러동포	재일동포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은 지금 무엇보다 해야 하는가?	남북간 민간 교류	25.9	6.4	24.5
	경제 협력	21.9	18.1	7.6
	남북정상회담	24.6	12.6	11.8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23.6	45.7	27.1
	남북간 문화교류	4.0	3.1	6.7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데 남북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상호 신뢰성 회복	33.0	36.2	29.9
	남북 공동 번영 방안 마련	20.2	17.2	9.2
	정기적인 남북 대화의 정착	14.5	9.5	9.6
	군비축소와 같은 평화 정착 노력	6.4	11.0	16.9
	외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인 자세	25.9	13.8	14.3

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제V장에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 4국에 흠어져 있는 재미·재중·재일·재러 동포가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역할을 담았다.

재외동포들은 거주국 국적자로서의 위치와 남북한 주민에 비해 정치적 중립성, 남북한과의 접촉 가능성 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은 남한 또는 북한의 단기적 국가 이익이나 정치적 명분보다는 한민족공동체의 장기적인 번영이라는 중립적 관점에서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양자관계를 매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거주국 및 남북한 사회 내에서의 인맥과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교류와 인적교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재외동포들의 방북과 인적 접촉은 북한 사회에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개혁·개방을 촉진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들은 거주국 내의 사회적 지위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주국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국제적 통일환경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외, 국가별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재미동포의 경우 실향민이 1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남북통일문제에 있어 더 이상 아웃사이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민주통일의 원칙을 설명하고, 방북을 통한 개혁개방 유도, 인도적 지원사업의 추진, 탈북자 보호 등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재중동포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남북한이 공유하는 전통 의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지위(국적)을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한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의 결과를 북한에게 소개하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갈등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재일동포사회의 경우, 일차적으로 민단과 조총련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소

하고, 젊은 세대의 민족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재일동포사회 간의 자율적인 교류협력이 지속된다면,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한의 중재역할이 가능하다. 또한 통일한국에 의구심을 가진 일본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도 재일동포사회의 역할이다.

재러동포들은 구소련 시절부터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러시아 사회 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 왔으며, 높은 교육열 등은 사회 계층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재러동포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의 과정이 러시아의 국익과 부합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연해주 의 광활한 토지를 일군 경험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수할 수 있으며, 통일 이후 북한노동력과 결합하여 연해주 개발사업에 본격적인 참여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체험한 경험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제언

가. 고려사항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교육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방향, 목표, 내용면에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만을 전개해 왔을 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체제와 내용을 정립하지 못하여 남남갈등만을 심화시켜 온 일면이 있다. 하여, 올바른 국가관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별,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상황변화, 연구의 인적 자원, 결과의 확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별 사업으로 시민·사회단체(2011), 국제사회·재외동포(2012), 북한이탈주민(2013), 학교(2014)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통일교육 교재의 집필방향은 헌법 제4조의 정신과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으며,¹³⁾ ① 통일관련 단체들의 현실적 요구와 ② 교육일선에

13) 우리헌법은 전문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고 되어 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중사하는 담당자들의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③ 다양한 사회저명인사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기초로 하여 진행되었다. 아울러 현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시대임을 반영하여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이 요청되었는바, 텍스트 위주의 교재에서 탈피하여 시청각 위주(동영상, PPT)의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다.

본 연구사업은 학술적 차원의 연구방향을 가급적 지양하고, 교육대상에 따라 일반인 누구나 쉽게 통일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다른 가능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교재개발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Q&A

- 주변 4국의 <세계전략> <동아시아 전략> <한반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주변 4국의 한반도에 대해 어떠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
- 주변 4국의 여론주도층이 갖고 있는 통일한국에 대한 실제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 한국의 어떠한 통일정책이 주변 4국의 국민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는가?
- 통일한국이 성립될 경우, 주변 4국이 얻게 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익에는 어떠한 것들이 성립 가능한가?

통일한국은 주변 4국을 적절히 활용할 때, 궁극적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2가지 주요한 목표, 즉, ① 주변 4국과의 우호적 통일 환경조성, ②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2년은 러시아(3월), 중국·미국(11월), 한국(12월) 등의 순으로 정권교체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통일의 국제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국가전략¹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로부터 주변국 설득 논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14) 냉전시대 국가전략 개념은 주로 군사적 안보를 의미했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망라하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 국방부가 2006년 2월 발표한 『4년 주기 국방태세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에서는 21세기 안보위협에 대해 ‘전통적위협,’ ‘비정규적 위협,’ ‘재앙적 위협,’ ‘파괴적 위협’ 등으로 분류하고, 전통적 위협으로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행위, 비정규적 위협에는 비재래식 방법(테러, 폭동, 내전)으로 전통적 우위의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재앙적 위협에는 대량살상무기나 유사한 효과의 무기로 미국의 상징물에 기습공격하는 행위, 파괴적 위협으로는 생물화학무기, 사이버작전, 우주무기 등에 의한 치명적 위협 등으로 규정했다. Pentagon, *Quadrennial defense*

라서, 주변 4국의 세계전략 및 대한반도 정책을 검토하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갈등·대립관계는 세가지 차원에서 중층적인 구조를 안고 있다. 첫째,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 간의 대결이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해양 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대치이다. 셋째,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대결 구도이다.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해양세력(한·미·일) 對 대륙세력(중·러·북) 간의 갈등과 협력관계가 지속되는 공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 남방3각’ 동맹 對 ‘신 북방3각’ 동맹의 대립이 부활될 수도 있다.¹⁵⁾

미국의 국가전략은 전세계적 차원의 패권유지, 대중 봉쇄, 미·일 경제 및 안보 협력체제의 유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 등으로 분석되었다.¹⁶⁾ 중국의 국가전략은 G2시대에 걸맞는 위상확보,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주변정세의 안정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 차단 등으로 조사되었다.¹⁷⁾ 일본의 국가전략은 보통 국가로의 등장, 동아시아 경제 주도권의 회복,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방어 및 견제이며,¹⁸⁾ 러시아의 최우선 국가전략은 강한 러시아의 부활,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견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 시베리아 경제개발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¹⁹⁾

주변 4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속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확증할 만한 자료 확보가 최우선적이나, 중국처럼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국가의 경우 용이하지 않을

Review. <<http://www.globalsecurity.org>>.

- 15) 허문영, “2015년 동북아의 갈등 대립관계 전망,” 『2015년 한·중·일 역학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p. 492.
- 16) “Deputy Secretary Steinberg on U. S. Policy Toward Asia,” <<http://www.carnegieendowment.org/event/?fa=eventDetail&id=3-45>>; Merle David Kellerhals Jr. “Clinton Outlines U.S. Policy in East Asia, Pacific,”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article/2011/11/20111110172816elrem0.994_2438.html>; Joseph S. Nye, “Obama’s Pacific Pivot,”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obamas-pacific-pivot>>.
- 17) 예즈 청,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북스, 2005); 이희옥, 『중국의 국가대전략연구』 (서울: 폴리테이아, 2007);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金灿荣(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교수), “当前中国战略的研究特点,” 『人民论坛』, 2010.10, p. 26.
- 18) Herman S. Wolk, “Sixty-Five Years on: Plans and Strategy to Defeat Japan in World War II,” *Air Power History*, Fall (2010), pp. 6~13; Mike M. Mochizuki, “Japan’s Shifting Strategy Toward the Rise of China,”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0, No. 4, 5(August-October, 2007), pp. 740~746.
- 19)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оссия сосредотачивается - вызовы, на которые мы должны ответить,” *Известия* (16 января 2012 г.).

것이므로 가능한 공식·비공식 문헌을 참조하고, 정책결정자의 발언에 관한 함의를 분석하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관련 통계자료(statistical research)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금년도 연구에서는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사회의 역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의 근원인 한반도 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그 이후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따른 국가별 국익과 재외동포사회의 통일 의식 및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재외동포사회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통일한국을 바라보는 주변 4국의 입장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통일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우려하는 것은 중국에 편입될 가능성과 그에 따라 자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염려한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성립될 경우 주한미군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며, 일본은 한국의 강한 민족정서를 감안하여 반일본화 경향의 국가로 변모되지 않을까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입장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시베리아 경제발전과 대한반도 영향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통일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주변 4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사회의 입장이 서로 상이하다. 미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나, 중국과 러시아의 재외동포들은 그러한 전제에 일정부분 거부감을 갖고 있다. 각 체제의 장점을 혼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사회는 해당 거주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친숙성을 토대로 하여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그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 그동안 우리정부는 재외동포들을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주류사회를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듯 재외동포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부채가 아니라,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다. 뛰어난 교육열을 바탕으로 해당 거주국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할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넷째, 재외동포사회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726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중에서, 279만 명에 달하는 39%가 한국의 선거권을 갖고 있으며,²⁰⁾ 61%에 달하는 447만 명이 해당 거주국가의 국적

20) 『경향신문』, 2011년 8월 31일.

을 보유하고 있다. 15~16대 대통령 선거에서 1~2위 후보간 득표차가 30~50만 표 이내로 당락이 결정된 것을 감안할 때, 선거에 미치는 재외동포사회의 영향력은 날로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지만 통일에 대한 논의는 아직 단일 민족 문화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하였다. 하지만 아직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논의나 프로그램이 없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자라나면서 통일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없을 경우, 통일 무관심층 혹은 통일 반대층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²¹⁾

나. 정책적 추진방안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1) 통일교육지원법 및 통일교육지침서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 1항은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 지원법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와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등에서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재외동포도 참정권이 부여된 대한민국 국민이며, 모국의 실상을 잘 모르는 교포 3~4세대의 경우 한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도 교육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만들어진 통일교육지침서 내용 역

21) 사실 한국사회의 다문화 전통은 오랜 기원을 갖고 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 귀화인들이 존재하였고, 특히 11세기 고려시대에는 중국인들과 유민, 포로 신분으로 온 발해인과 여진인, 거란인, 아랍인을 포함해 귀화인이 약 17만 명에 달하였다. 당시 고려 인구가 약 230만 명 정도였으니 인구대비 8%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였다.

시 재외동포사회를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직, 통일교육의 방향만을 적시할 뿐, 교포들에게 적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지원법과 통일교육지침서의 개정이 요구된다. 아울러,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매뉴얼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제안 2) ‘주변 4국’ 언어로 통일관련 자료의 개발·보급

재외동포사회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들이 거의 사망하거나 또는 2세대의 고령화에 이어 3~4세대가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3~4세대는 해당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화된 상태임으로 한국어를 자유롭게 읽거나 쓰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270만 4,994명), 미국(217만 6,998명), 일본(90만 4,806명), 독립국가연합(53만 5,679명)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해당국 언어로 된 통일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외, 각 국가별 언어로 점차 그 보급대상을 넓혀 나가야 한다.

또한 각 국가별 한반도 전문가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국가별 여론 주도층 재외동포들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통일관련 자료들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자료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한반도 전문가(학자, 지식인), 학생, 일반인 등을 구분하여 집필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방식 역시 동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제안 3) ‘주변 4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통일(필요성) 논리 개발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서로 상이하듯, 해당 거주국 재외동포들의 입장 또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함에 있어, 통일한국이 성립될 경우 해당국가에 줄 기대이익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한민족의 통일은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가 요구된다. 여기에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차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²²⁾

또한 한국 디아스포라의 역사, 정체성 및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연대성 강화 논리도 개발되어야 하며, 전세계 각 국가들의 디아스포라 정책 성공사례를

22) 윤병석 편역, 『안중근 문집』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pp. 567~572.

비교·분석하여 소개해 줄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해외동포들이 모국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통일정책과 분단극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그리고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야, 주변국가로 하여금 통일의 당위성을 용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안 4) 교육기관의 지정 및 체계적 관리(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들의 고국 방문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자란 3~4세대의 모국방문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²³⁾ 그러나, 이들 세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몇몇 대학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가 그나마 다행스러울 정도다. 고국 방문 재외동포들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기관별로 나뉜 역할을 일정부분 통합·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²⁴⁾ 하나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그 외 기관이 이를 보조·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되, 현장 문화체험 학습이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본 사업은 사회통일교육(2011년), 국제·재외동포사회 통일교육(2012년), 북한주민·탈북자 통일교육(2013년), 학교통일교육(2014년) 등으로 이어지는 연차별 사업이므로, 대상·수준별 맞춤형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이 주변 4국의 국가이익과 양립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부

23) 2012년 한인 차세대 방문단의 경우 국토대장정(120명), 어린이 잼버리(280명)를 포함 최소 4개 단체에 이르며, 이외 중고생과 대학생 모국연수 프로그램에서도 총 1,000여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2012년 5월 26일.

24) 재외동포재단은 2010년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문화연수를 위한 ‘재외동포교육문화연수원 건립’을 계획하고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국제연구교류단지 내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된바 있다.

족한 부분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통일의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반도 주변 4국의 급격한 정치상황 변화(최고 지도자의 교체)에 대응하고, 관련국가의 파워 엘리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익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의 지지 세력 확보 및 지한파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의 700만 해외동포들은 소중한 국가자신이며, 이들은 해당 거주국 정치·경제·언론·예술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연구성과물이 배포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연구성과물은 해외 사업을 지속해 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립외교원, 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보급하고, 개발된 연구성과물은 당 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동포 및 국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단행본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편. 『코리언의 분단·통일의식』. 서울: 선인, 2012.
-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정치 현실과 이상』. 서울: 범문사, 1995.
-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 배기찬.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로에서다』. 고양: 위즈덤하우스, 2005.
- 예츠 칭. 『중국의 세계전략』. 서울: 21세기북스, 2005.
- 외교통상부. 『2011년 재외동포 현황』. 서울: 외교통상부, 2012.
- 윤병석 편역. 『안중근 문집』.(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이희욱. 『중국의 국가대전략연구』. 서울: 폴리테이아, 2007.
- 최진욱.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허문영 외. 『통일교육: 과거, 현재, 미래』. 서울: 통일연구원, 2011.

2. 논문

- 김재기. “남북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대북한 경제협력: 중국 조선족과 재일 조총련 동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0권 1호 (한국동북아학회), 2005.
- 손기섭. “일본자민당의 전후국가전략.” 『국제관계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3호).
- 우병국. “남북교류 활성화와 재중동포사회의 역할: 현황, 한계 및 전망.” 『동서연구』, 제22권 제1호 (2010년 6월).
- 제성훈. “푸틴의 귀환, 러시아의 진로: 3기 푸틴정부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정책전망.” 『코리아 연구원 현안진단』, 제216호, 2012.5.
- 허문영. “2015년 동북아의 갈등 대립관계 전망.” 『2015년 한·중·일 역학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金灿荣(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부원장, 교수). “当前中国战略的研究特点.” 『人民论坛』, 2010.10.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2000.

Herman S. Wolk. "Sixty-Five Years on: Plans and Strategy to Defeat Japan in World War II." *Air Power History* (Fall), 2010.

Mike M. Mochizuki. "Japan's Shifiting Strategy Toward the Rise of China."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0, No. 4, 5 (August-October), 2007.

Joseph S. Nye Jr. "Redefining the National Interests." *Foreign Affairs*, Vol. 78, No. 4, 1999.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Россия сосредотачивается - вызовы, на которые мы должны ответить." Известия (16 января 2012 г.).

3. 기타자료

『경향신문』.

『재외동포신문』.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May 2010.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rss_viewer/national_security_strategy.pdf>.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February 2010). <http://www.defense.gov/qdr/images/QDR_as_of_12Feb10_1000.pdf>.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April 2010>. <http://www.defense.gov/npr/docs/2010%20Nuclear%20Posture%20Review%20Report.pdf>>.

Pentagon. *Quadrennial defense Review*. <<http://www.globalsecurity.org>>. "Deputy Secretary Steinberg on U. S. Policy Toward Asia," <<http://www.carnegieendowment.org/event/?fa=eventDetail&id=3-45>>.

Merle David Kellerhals Jr. "Clinton Outlines U.S. Policy in East Asia, Pacific," <<http://iipdigital.usembassy.gov/st/english/article/2011/11/20111110172816elrem0.9942438.html>>.

